

도축장 구조조정 합리적 지원필요

축산물 위생처리협,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지난 5월 16일 경기 군포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도축장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홍보부 -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8백억원대 규모의 지원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설 지원자금 등 융자금 형식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탄력적인 변경을 요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16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경기도 군포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에서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축장 구조조정 위해 800억 지원 필요

권 본부장은 이날 올 해만도 전 세계적으로 300개 가량의 FTA가 발효될 정도로 경쟁적 FTA 체결분위기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적게는 5천억원에서 9천억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이는 축산업의 위축과 함께 도축장 경영난도 더욱 심화될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2005년말 국내 도축장 14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785%를 기록, 국내기업 제조업

평균 104%와 육류 및 유지가공업 평균 259%에 비해 너무 높으며 도축장 경영 악화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축물량에 비해 도축가공시설이 과잉돼 최근 3년간 평균가동률이 소 27%, 돼지 45% 이하 수준이며 HACCP 적용 의무화로 인해 영세소규모 업체들까지 무리한 시설자금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FTA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더라도 경제내 모든 부문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매출, 생산, 고용 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그 성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책은 도축장이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임에도 농업인 지원과 제조업 무역조정지원 등 어느 한군데도 속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도축장 구조개선을 위해 '83년 권역화 계획과 '94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벌인 데 따라 이제는 도축장 경영정상화와 위생적 육류유통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육류물량과 지역 조건을 고려할 때 약 30개 정도의 도축장 숫자가 적합하고, 도축장 고정자산을 통틀어 약 3천8백억 원 가량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에 해당하는 8백60억원 가량의 정부보조가 이뤄져야 구조조정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현재 도축장의 위기는 정부가 도축장 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위생수준을 높이면 조금 지원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고 위생평가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에 축산발전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을 할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육류산업의 핵심주체 되어야

또한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 조합장도 도축장 구조조정은 당연히 이뤄져야함에도 신규허가는 최근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도축업은 농업에도 제조업에도 포함되지 못해왔지만, 육류산업의 핵심적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축장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수료 책정과 더불어 비합리적인 비용요소를 없애고, 우리가 경쟁해야 할 축산선진국들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 착안해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는 경영난 타개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용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구조조정 및 숫자 줄이기가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도축장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수수료 취득을 통한 민간운영 자체가 모순이다. 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결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는 덴마크도 도축장 구조조정을 단행한 지 불과 2~3년 지났다고 지적하며, 도축장 문제는 국민건강 담보라는 상당한 역할을 인정해 적어도 망하지는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들은 결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원하는 것 뿐이라며, 도축장 수가 너무 많고 물량이 적어 과당경쟁을 한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축산물을 제공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돈**